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은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와 채무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에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및 기타 가계자금대출 등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차주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④ 이자·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 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의 종료일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고정금리 방식)
2. 대출계약의 종료일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변동금리 방식)

③ 제 2 항 제 1 호를 선택한 경우에 대출계약 종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 2 항 제 2 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 또는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 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대출계약 해지에 따라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연배상금률(연체이자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 1 항 및 제 2 항 제 2 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팩스 등으로 제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 1 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 년을 365 일(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행은 대출 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의하여 약정이자, 중도상환해약금(대출기간 종료일 전 상환할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통지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 1 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을 말함)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 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 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 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절한 조치없이 위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 1 항 제 1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5 조, 제 17 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6 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

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 8 조 기한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상실의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 7 조 제 1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 1 호·제 4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 2 호·제 3 호·제 5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 7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 7 조 제 5 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 7 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제 예치금 등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등을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 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제 7 조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일과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중 늦은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경우, 상계한 기한 미도래 제 예치금 등의 이율과 계산방법은 해당 제 예치금 등의 가입 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제 11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한 제 예치금 등과 은행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유선통화, 전자우편 등 통지방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제 예치금 등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증서에 인감도장 등 채무자의 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장을 찍거나 자필서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대출계약 철회

-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 일(이하, "철회 기한") 이내에 모바일앱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출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 ③ 제 1 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 2 조 제 4 항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제 5 조 제 4 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 ④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⑤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⑥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 년 이내에 2 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 개월 이내에 1 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 13 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상환)

-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 10 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상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 2 항의 회수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담보가 없는 채무를 제쳐놓고 담보가 있는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채무자가 제 11 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⑤ 제 4 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 일 이내에, 제 3 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사고의 처리

- ①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 · 사변 · 재해 · 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 손상 ·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 · 손상 · 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종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이 제 증서 · 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 · 서명을, 함께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채무자의 도장임이 확인된 인영 · 채무자의 자필임이 확인된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인영 · 서명에 관하여 위조 · 변조 ·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등에 변

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통지의 효력

-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③ 채무자가 제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기타 서류 또는 전자우편이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 및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해 서면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하거나 전자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7 조 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이행방법 · 준거법

- ① 채무자는 은행과 약정한 계좌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입금한 후, 자동이체 또는 은행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상환거래를 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19 조 약관 · 부속약관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채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은행은 이를 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